	<h1>보도자료</h1> <h2>11.5(목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---	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			
책임자	최용호 산업금융과장 (2156-9750)	담당자	이종림 사무관 (2156-9752)	
배포일	'15. 11. 4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12매

제 목 : 창·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개혁, 40년만의 정책보증 大 개편
중소기업 「新 보증체계」 구축

① 창업·성장초기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☞ 창업·성장초기 기업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(14.3조원 → 17.6조원, 23%↑)

② 창업·성장초기 기업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☞ 창업·성장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(5년이상)로 보증을 제공

☞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면제(1,400개 → 약 4만개)

③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비하겠습니다.

☞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, 제공하는 「위탁보증」 제도 도입

④ 보증시스템을 합리화하겠습니다.

☞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보증(창업/성장/위탁/안정)을 제공

※ 금융위원회(위원장: 임종룡)는 10.29(목) 금융개혁회의(의장: 민상기)에서 “창·혁신·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「新 보증체계 마련」 방안”을 의결·발표

□ 금번 방안은 우리나라에 보증체계가 도입된지 약 40년만에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한데 의의

○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위, 학계, 연구원, 정책금융기관, 금융업계, 산업계가 공동으로 T/F를 구성하여 협업·추진(※ 10.8일 금융연구원 주관 공청회 개최)

I. 추진배경

□ 70년대 초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*되고, 창업 기회가 확대**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

* 경영애로요인 중 자금조달난(%): ('05)23.6 → ('10)14.4 → ('14)12.6 (통계청)

** 창업기업 수: ('08) 5만개 → ('14) 8.4만개

□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‘기득권화’,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‘안정기업 쏠림현상’ 등 문제*가 야기

* 전체 보증 중 10년이상 보증이용 기업 비중 25%, 업력 10년이상 기업 지원 비중 50%

○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*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

* 중소 한계기업 비중(한국은행): ('12)13.3% → ('13)14.2% → ('14) 15.3%

□ 한편, 우리의 경우 정책보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, 창·기술형 기업 등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형 기업 지원은 여전히 미흡

* 정책보증/중기대출(%): 한국 14.6%, 일본 13.2%, 프랑스 3.4%, 미국 2.1%

⇒ 보증이 도입된지 40년이 지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, 창·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시점

II. 개선방안

【 기본방향 】

40년만에 「新 보증체계」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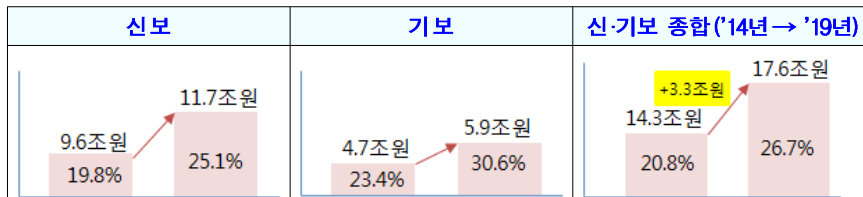
창업, 성장초기 기업지원 강화	성숙기 이후 보증이용 합리화	보증 시스템의 합리화
① 창업, 성장기 보증확대 ② 보증이용 부담 최소화 ③ 연대보증 면제 ④ 민간자본 연계강화	● 위탁보증 제도 도입 * 보증심사제공: (현행) 보증기관 → (개선) 은행	① 보증기관 업무특화 ② 보증의 시장안전판 역할 확대 ③ 성장단계별 보증도입

1 창업기·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

◆ 보증기관은 민간 자금 공급이 어려운 창업기·성장초기 기업 등 시장실패 부문에 역량을 집중

① 창업기, 성장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
- (문제점) 시장실패 영역*인 창업·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
 - * 창업·성장초기 기업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에서 자금 공급을 기피
 - 창업 3년 후 기업 생존율이 OECD중 최하위권*으로 데스벨리(창업후 3~5년)에 진입한 기업 지원 확대 필요
 - * (호주) 62.8%, (미) 57.6%, (이스라엘) 55.4%, (이태리) 54.8%, (한) 41.0%
- (개선방안)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'성숙기업 관리'에서 '창업·성장기업 지원'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
 - 신·기보의 창업지원 대폭 확대: 14.3조원 → 17.6조원 (3.3조원, 23% ↑)
 - *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 차지 비중: ('14년) 20.8% → ('19년) 26.7%



② death valley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·성장초기 기업의 불편 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겠습니다.

- (문제점) 공급자 중심의 보증공급 관행으로 인해 창업·성장초기 기업의 정책보증에 애로
 - 기업에 부담을 주는 1년 단위 보증심사·연장 구조로 인해 창업기·성장초기 기업이 지속적인 보증상환 부담에 노출
 - 보증 이용시부터 구체적인 상환시기가 사전에 약정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상환됨에 따라 계획적인 경영이 곤란

○ (개선방안)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 완화

-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이상 (5~8년)의 장기보증으로 전환
-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(85%)보다 높은 90% 보증비율(창업 1년내 100%) 적용
- 사전에 (창업)보증 이용기간과, 상환구조(예: 3년거치 5년 분할상환)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증사용

☞ 장기보증으로 보증심사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

☞ 보증비율 상향(85% → 90%)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현행 수준보다 경감되고, 은행 대출이 보다 용이

< 가상 사례 > BBB등급 기업이 2억원 대출 시(보증료율 1.1%가정)

보증비율	85%	90%
보증금액(보증수수료)	1.7억원(187만원)	1.8억원(198만원)
대출금액(대출이자*)	2억(756만원)	2억(686만원)
총 비용부담	943만원	884만원

※ 보증비율 상향에 따라 은행 대출이자 3.78% → 3.43%로 경감

☞ 보증계약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보증이용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합리적 보증이용이 가능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#1 지난해 ○○보증기관으로부터 2억원의 보증대출을 받은 A씨는 보증받으신 1년이 되어 다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연장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함. 재심사 받기 한달 전부터 기업의 경영 사정이 일부 악화됐는데 보증이 중단될까 노심초사

⇒ 앞으로 장기보증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기간 동안에는 매년 보증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심사부담 및 불확실성 없이 계획적 자금운용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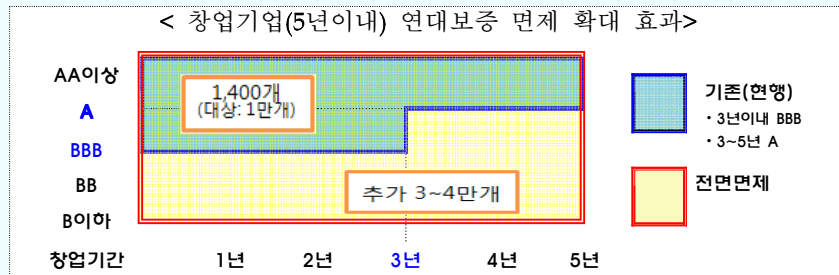
#2 휴대폰 모바일 관련 부속품을 납부하는 8년차 제조업체 사장인 B씨는 '10년부터 보증대출 이용중. 올해도 당연히 보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보증기관은 B씨의 업체가 올해부터 원금을 20%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. 갑작스런 상환 요구에 투자 등 시설확충 계획에 차질

⇒ 보증계약 체결 시부터 거치기간과 만기 상환구조가 약정됨에 따라 사전에 계획적으로 보증이용 및 상환이 가능

③ 창업·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완전 폐지됩니다.

- (문제점) 연대보증 면제 확대(창업 3년 이내, BBB 이상인 기업)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
 -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(3년 내 기업 생존율 41%)에서 연대보증 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
 - * (창업기피원인) 실패가 두려워서(55%), 자본이 부족해서(20%), 정보 부족(15%), 기타(10%)
- (개선방안)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
 -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 가능

☞ '15.9월말 기준 1,400개에서 향후 약 4만개 내외 기업(보증잔액 약 17조원)이 혜택 예상



☞ 연대보증 폐지로 우수한 기술력이 모험형 창업으로 연계되어 활성화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- #3 대학생 C씨는 창업을 결심하고 보증기관을 방문했으나, 보증기관은 대표자인 C씨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창업이 주저되는 상황. 가족들 역시 사업 실패후 연대보증채무로 살림이 어려워진 작은아버지 사례를 들며 창업을 만류
- ⇒ 앞으로 우수한 기술만 있다면 보증기관은 대표자 C씨를 포함 어느 누구에게라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음. 따라서 C씨는 창업에 대한 실패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

④ 창업·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(문제점) 혁신·기술형 창업기업일수록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으나, 창업·성장초기 기업은 높은 리스크로 보증외의 자금조달에 애로
 -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일부 직접투자*를 하고 있으나, 성과 미흡
 - * 보증연계투자(보증기업 중 우수기업에 보증기관이 투자): 10년간 약 2,500억원
 - * 투자유선부 보증(보증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보증 → 투자 전환 옵션체결): '15.6말기준 120억원
- (개선방안)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하여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
 - '보증연계투자'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*로 확대하고,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% → 20%로 완화
 - * 보증기관이 기업 pool을 구성 ⇒ VC·엔젤머니가 투자기업을 발굴 ⇒ 보증기관과 VC·엔젤머니가 공동으로 심사·투자
 - '투자유선부 보증'의 취급기관을 확대(기보 → 신보추가)하고 투자 기간을 연장*하여 기업의 성장성을 보아가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확대
 - * 창업후 3년 내 기업, 보증후 3년 내 옵션행사 → 창업후 5년 내 기업, 보증 후 5년 내 옵션 행사

☞ 보증기관~민간 협력을 통해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자본규모 확대

- * 신·기보 단독시보다 VC, 엔젤머니 등 통해 투자효과가 2배 이상 증가

☞ 투자기간 확대로 기업이 투자자(보증기관)를 대상으로 성장성을 어필하여 보다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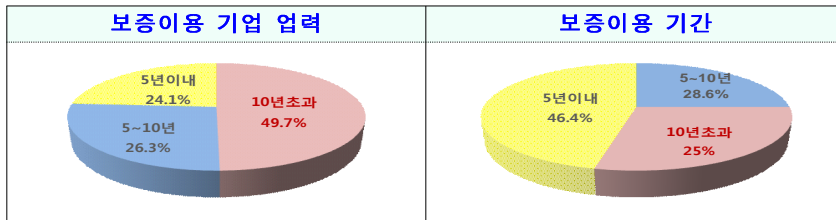
- #4 D기업은 보증 계약시부터 보증기관과 투자유선부 보증 계약을 체결. 보증 후 4년 3개월이 되는 해에 D기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었으나 이미 옵션만기(보증후 3년)가 초과되어 D기업이 보증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놓침
- ⇒ 앞으로 보증이후 5년 이내 기업까지 보증기관이 투자유선부 보증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보증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확대

2 성장후기·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

◆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은 시장의 평가와 선택으로 정비

□ **위탁보증을 통해 장기보증은 축소·효율화** 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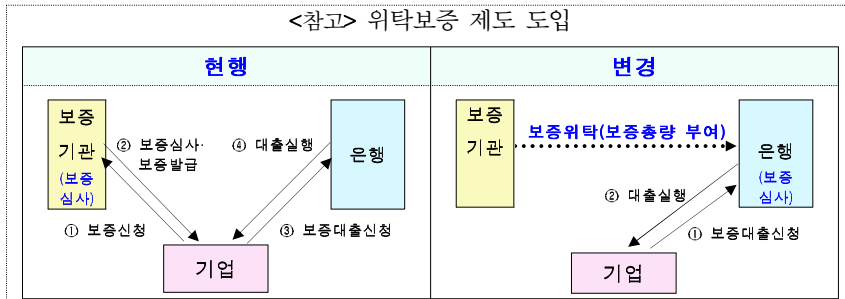
- (문제점) 우량·장기기업(10년이상 보증이용 비율 25%)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수적 보증운용 관행으로 신규, 성장기업 지원에 소홀



- (개선방안) 성숙기 이후 기업*의 보증은 **은행이 심사해서** 제공하는 '新 위탁보증' 도입으로 **보증이용 효율화**

* 성장보증(시설 8년, 운전 5년) 약정기간 도래 기업, 기존 보증은 10년이상 이용 기업

-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,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 기관 대신 **은행을 방문하여**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



- 은행은 **위탁보증 총량**(보증기관 → 은행 설정) 내에서 기업을 심사 후 **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(85~50%)**을 선택
- (우수기업) 기술력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**은행은 보증비율 축소**
- (한계기업) 장기로 보증을 이용했으나, 성장이 정체되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 **은행은 보증을 상환**(축소)

< 은행의 위탁보증 포트폴리오 구성(가상사례) >

	(현행) A은행 위탁 대상 보증 현황				(개선) A은행 위탁 보증 도입 후		
	보증잔액	대출총액	보증비율		보증잔액	대출총액	보증비율
'가'기업	0.85	1.0	모든기업 85% 동일적용	은행 자율 운영	0.7	1.4	50%
'나'기업	1.7	2.0			1.7	2.0	85%
'다'기업	0.85	1.0			1.6	2.0	80%
'라'기업	0.6	0.7			상환	상환	-
계	4억원	4.7억원			4억원	5.4억원	차등적용

① '가'기업: 우수기업

-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가능한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은 줄이면서 신용대출은 확대

☞ 은행 총 대출은 1억원(보증비율 85%)에서 1.4억원(보증비율 50%)

② '나'기업: 일반기업

- 기업의 성장성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신용위험도 중간단계인 기업으로 **현행 수준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** 유지

③ '다'기업: 성장기업

-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보증비율은 80%로 인하하고, 보증 규모도 확대

☞ 은행 총 대출은 1억원(보증비율 85%)에서 2억원(보증비율 80%)

④ '라'기업: 한계기업

-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 왔으나, **성장이 정체되고** 신용도도 악화되는 한계기업으로 **보증의 축소가** 필요한 기업(0.7억원 상환)

☞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웠던 **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** 문제가 **민간의 전문성을 통해** 시정 가능

- 기업의 성장성에 맞게 **다양한 보증비율(85~50%)** 적용 과정에서 오히려 **신용창출 여력이 확대**

* (기존) 보증자원 4.25억원으로 보증비율 85% 적용시 5억원 대출 가능
(변경) 보증자원 4.25억원으로 **보증비율 50% 적용시 8.5억원** 신용 창출

☞ (보증기업)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**은행이 보증여부를** 심사하게 됨에 따라 **시중 자금의 적시 조달** 가능

- 은행방문시 보증과 대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**이용편의 제고**

☞ (은행·보증기관) 은행은 여신심사 능력이 제고되고, 보증기관은 창업·기술기업에 심사 여력을 확대

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

◆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자금 수요에 정책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재원집행의 효율성을 제고

① 보증기관간 영역을 특화하여 보다 정밀하게 보증을 제공할 것입니다.

○ (문제점) 복수의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등 효율적인 기능 재정비 미흡

- (신·기보) 업무 중복*은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, 기관간 업무 특화는 미흡

* 신·기보 복수거래 잔액(비중): ('05년) 7.5조원(26.0%) → ('14년) 1.6조원(4.0%)

- (신보·지신보) 지신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신보와 지신보 사이에 업무 중복도 심화*되는 추세

* 신보~지신보 복수거래 잔액(비중): ('11년) 3.3조원(8.7%) → ('14년) 3.8조원(9.2%)

○ (개선방안) (신·기보)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, 기보는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·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

* 신보는 지식서비스업, 고용안정형 제조업을,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, 서비스업(소프트웨어, 엔지니어링) 등 지원

- (신보·지신보) 신보는 향후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“모험형창업”을, 관계형 금융에 특화된 지신보는 영세한 “생계형 창업” 지원



- (개인사업자) 창업기에는 신·기보도 지원하되, 성장이 정체되는 성장 단계 이후에는 신보와 지신보가 지원(기보는 지원 종료)

☞ 각 보증기관은 업종관련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고, 관련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증 제공 가능

② 보증이 시장안전판 기능을 든든하게 제공할 것입니다.

○ (문제점) 재난, 질병, 경기침체 등 위기시 특례보증이 있으나, 임시방편적(특례)*으로 운용되고 있어 든든한 안전판으로 기능에 한계

* 메르스피해 특례보증(3개월 운용): 보증비율 90%, 보증수수료 1.0%(통상 1~2%) 우대

- 또한, 상환구조가 없어 특례보증의 취지와 달리 장기로 이용되는 문제

○ (개선방안) 「안정보증」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 안전판 기능을 제공하고, 일시적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원

- 거치후 분할상환(예: 2년거치, 3년상환) 방식을 도입하여 한시적 위험 대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

☞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환경 구축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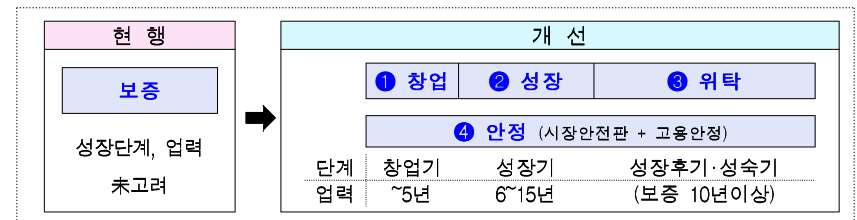
#5 3대째 김치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맛과 품질 등을 인정받아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나, 주요 수입국가의 정책 변화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감

⇒ 경제환경 변화, 질병 등 위기시 제공되는 안정보증을 받음으로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

③ 기업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및 계정을 도입하겠습니다.

○ (문제점)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수요와 부담여력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한 보증(보증비율 85%, 매년심사) 체계로 운용

○ (개선방안)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보증, 성장보증, 위탁보증, 안정보증으로 세분화(※ 계정도 보증에 맞게 구분)



☞ 보증기관간(신·기보, 신보·지신보)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

Ⅲ. 기대효과

◆ 금번 「新 보증체계」 구축 방안은 보증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는데 의의

1. 창업·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'창업하기 좋은 환경' 조성

- ☐ 창업·성장초기 보증공급 확대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됨으로써 모험적 창업이 활성화
- ☐ 창업 5년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창업부담이 줄고,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연계

2.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 제고

- ☐ 창업·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장기보증으로 보증의 심사와 상환부담 경감
- ☐ 보증비율 상향(85% → 90%)으로 조달비용 감소

3. 장기보증 이용 합리화로 신규·창업보증 강화 등 선순환 구축

- ☐ 위탁보증 도입으로 보수적인 보증구조에서 벗어나 한계기업 조정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
- ☐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증조건(보증비율 85~50%)으로 맞춤형 보증 제공이 가능하고, 이 과정에서 신용창출 여력도 확대

4. 보증기관 역할 재정립으로 보증 시스템을 선진화

- ☐ 보증기관간(신·기보, 신보·지신보)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
- ☐ 안정보증으로 고용불안정 등 어려움 발생시에도 보증이 든든한 시장 안전판 기능으로 자리매김

Ⅳ. 향후계획

◆ 필요한 제도개선은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「新 보증체계 구축」 방안을 시행

내 용	일 정 (조치사항)
① 창업·성장초기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	'16. 1분기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
② 보증연계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10% → 20% 확대	'16. 上 신·기보 법률 개정
③ 보증연계투자 보증금액의 2배이상 확대	'16. 1분기 금융위 고시 마련
④ 투자유선 행사요건 완화, 투자유선 한도 상향	'15. 末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
⑤ IPO 전담 조직 구성	'16. 上 조직개편
⑥ 新 보증체계 도입 - (창업 / 성장 / 위탁 / 안정) - 장기보증(창업), 분할상환(창업, 안정) 등	'17년 부터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
- 기존 장기보증이용자 위탁보증 제도 편입 *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	'17 ~ '21년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
⑦ 보증 계정구분	'17년 부터 시스템 개편

< 별첨 >중소기업 「新 보증체계」 구축 세부내용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